

# 제주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 - 연구현황과 과제탐색 -

허 호 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 <국문요약>

냉전적 세계 질서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4·3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이데올로기적 색깔에 따라 채색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따른 4·3의 실체는 오랜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망각되어왔다.

4·3을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억눌린 역사의 기억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작업이다. 4·3은 국가권력의 독점시기였던 1948년부터 1987년 사이에는 '폭동'이었고, 희생자들은 '폭도'로 낙인 찍혔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간이 4·3 담론을 주도했다. 4·3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진실규명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그러한 교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한 4·3연구는 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 대계릴라전과 대량학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4·3연구물의 번역 작업도 필요하다.

주제어 : 4·3연구, 민주화운동, 국가권력, 집단기억, 대량학살

---

\* 이 글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가 2011년 11월 11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 '제주4·3의 현재와 미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 1. 서론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시작된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분돼 이념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충돌이 유혈 충돌로 확산됐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남한 곳곳에서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 가운데 4·3은 유엔이 제정한 '제노사이드 협약'의 맥락 속에서 논의할 수 있을 만큼 학살의 유형과 규모, 정부조직 및 준군사단체들의 개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공체제 아래 억압받고, 탄압을 받았던 4·3 연구는 한국 현대사의 진전과 쉼을 같이 했다.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4·3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1948년의 5·10선거를 저지한 유일한 '대사건'이었지만 투쟁의 대가는 가혹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가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할 때까지 국가권력의 폭력적 억압으로 '망각'을 강요당해온 4·3의 진실 밝히기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반공독재체제가 무너지면서 한때 유족과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다음해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로 또다시 긴 침묵을 강요당했다.<sup>1)</sup>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4·3 논의는 금

1) 4·19혁명 이후 제주대학교 학생 7명은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해 도보로 일주도로변 50개 마을을 돌며 자체 조사에 나섰고, 모슬포 지역 주민들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제주신보사는 1960년 6월 2일 사고를 내고 '4·3사건 및 6·25 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하기 시작해 6월 10일까지 1259건의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인명피해는 1457명에 이르렀다. 이 신고서를 접수한 『제주신보』 전부 신두방은 6월 23일 제주시 외도동에서의 일가족 학살사건을 검찰청에 고발했다. 가파도 출신 통일사회당 김성숙 의원은 1961년 1월 26일 "4·3사건 및 6·25사변 중 4~5만명의 제주도 양민이 학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경향신문』 1961. 1.26; 『동아일보』 1961. 1.26.

기를 넘어 탄압의 대상이었다.

본격적인 4·3 논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1990년 이후 세계사적인 추세가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탈냉전적 역사사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는 와중에 4·3과 관련해 억눌려온 집단기억들이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붓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러나 반세기 가까이 망각과 침묵을 강요당해 온 4·3은 기록의 부재로 진상을 밝히는 작업을 어렵게 했다. 기존의 연구자료가 없었고, 그나마 있는 관련자료들은 4·3을 모두 편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도 국가권력의 억압적 기제를 뚫고 증언과 기록에 의거해 4·3의 진실 드러내기와 연구가 이뤄져왔다. 제주사람들은 그 나름의 문화적 의미 체계에 따라 '대항기억'(counter-memory)을 보존하고 재생산함으로써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공식적 역사의 지배적 담론에 대항하는 헤게모니 투쟁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전개했다.<sup>2)</sup> 이를 바탕으로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4·3연구 성과들이 꾸준히 발표되었고,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특별법 제정으로 4·3에 대한 관심이 한층 증폭된 측면도 있지만, 법 제정 이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실천적 접근에서 법 제정 이후 학문적 연구 영역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이제 4·3연구는 기존 발굴된 자료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공간과 인력이 확대된 학문으로서의 연구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글은 4·3유족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연구자들의 기존의 연구 성과를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4·3연구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가권력이 4·3논의를 독점한 시기부터 민간부문이 4·3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

2)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서울: 푸른역사, 2000), p.66.

3) 장운식, 「4·3특별법 제정 이후 4·3연구의 현황과 과제」, 『기억을 넘어 화해로 - 4·3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4·3연구소, 2008년 4월 3~5일, p.387.

에 이르기까지의 4·3연구를 고찰하겠다. 이어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수집, 연구의 방법과 방향 등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 2. 4·3연구의 의미와 기존 연구의 검토

냉전적 세계 질서 속에서 그리고 남북이 대치하는 민족적 상황에서, 4·3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이데올로기적 색깔에 따라 채색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거한 4·3의 실체는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기 보다는 국가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망각되어왔다.

4·3 이후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소외됐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제주도지사로 부임한 김영관도 중앙정부의 제주도 소외론을 거론했다. 그는 제주도에 부임할 때 “4·3사건 이래로 10여년 동안 정부 시책에서 버림받아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4·3사건의 일부 책임이 행정의 졸렬에서 파생되었다는 이야기는 긍정되는 바가 있다.……그 어마어마한 피해에 대한 원한이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살아지리라고 믿는 편이 오히려 무리일 것이다”라고 말했다.<sup>4)</sup>

4·3의 비극성은 제주사람들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억울하게 죽었고, 공개적으로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빨갱이’ ‘폭도’라는 낙인이 찍힌 채 기억을 억압당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국가권력의 억압에도 제주사람들의 4·3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사람들의 내면에 집단 기억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4·3을 연구하고 그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살아 있지만 억눌린 역사의 기억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작업이다.

4·3연구의 중심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가 자리하고 있다. 4·3연

---

4) 김영관, ‘재일동포와의 유대 강화의 길’, 『제주도』 제5호(제주: 제주도, 1962), pp.21-23.

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종민, 박찬식, 장윤식의 선행연구에 정리돼 있다.<sup>5)</sup> 이들 글은 4·3 50주년과 6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진실을 드러낼 수 없었던 금기와 억압의 시기, 1960년 4·19혁명 직후 일어났던 폭발적이었지만 단기간에 그쳤던 4·3 진상규명 요구 시기, 5·16 군사쿠데타 이후 20여년 동안의 재탄압과 재억압의 시기에 있었던 4·3 논의를 살폈다. 또한 1987년 민주화운동 시기 이후 분출된 4·3 진상규명운동과 이 시기에 나오기 시작한 각종 자료와 연구 동향, 문화예술 등 부문별 운동진영의 4·3 진상규명 투쟁 등 험난했던 4·3 진실찾기 여정을 담고 있다.

김종민은 4·3 발발 50주년을 맞아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제주사람들이 '4·3'으로 인해 겪었던 치욕과 분노, 좌절과 체념, 피해의식 등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이 맡아야 할 주제지만,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연구된 바가 없다고 평가했다.<sup>6)</sup> 이어 10년 뒤인 60주년 즈음에 연구의 추이와 전망을 정리한 박찬식은 4·3에 대한 사실 파악조차도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앞서 나가면 4·3연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담론으로의 급속한 전화를 경계하고 역사주의적 접근을 통한 4·3의 전체상 복원을 강조했다.<sup>7)</sup> 제주4·3 연구소가 4·3 60주년을 맞아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장윤식은 앞의 선행 연구에 이어 4·3 50주년에서 60주년까지 10년간의 4·3연구를 개괄하고, 4·3경험자 가운데 군인과 경찰, 서북청년단 출신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일본으로 건너간 경험자, 미군정 복무 경험자들에 대한 구술채록과 종합일지 작성, 국내외 자료의 수집 중요성과 함께 국내외 평화인권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4·3논의를 평화와 인권 실천의 장으로 끌어올려

5) 김종민, 「4·3 이후 50년」, 『제주4·3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9); 박찬식,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4·3과 역사』(제주: 각, 2008); 장윤식, 앞의 자료집.

6) 김종민, 앞의 책, p.340.

7) 박찬식, 『4·3과 역사』(제주: 각, 2008), p.492.

야 한다고 강조했다.<sup>8)</sup>

### 3. 국가권력의 4·3담론 독점 시기: 1948-1987

#### 1) 군·경의 4·3 인식

4·3 경험세대들이 자신들 또는 가족들의 피해를 얘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승만 정권 이래 1960년 4·19혁명 직후의 짧았던 진상규명 요구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4·3 담론은 국가권력이 독점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전 모든 관변자료들은 전통주의적 시각으로서 4·3을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4·3=폭동'이며 '희생자=폭도'라는 등식을 강요했다. 제주4·3위원회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4·3을 정의<sup>9)</sup>할 때까지 4·3의 공식적 기록은 기존 군·경 등 관변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폭동'이었고, '반란'이었다. 그러나 제주4·3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 대통령의 사과 이후까지도 관변측 자료들은 4·3을 '폭동'이고 '반란'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4·3을 언급한 최초의 관변 자료는 정일권·예관수가 1948년 8월 국방경비대의 교육자료로 펴낸 『공산군의 유격전법과 경비와 토벌』이다. 이 책은 제주4·3사건을 정치적 측면이 강한 유격전으로 언급하고 있다.<sup>10)</sup> 이어 1952년 3월 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간행회

8) 장윤식, 앞의 자료집, pp.390-391.

9)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서울: 동위원회, 2003), p.536.

10) 정일권·예관수 공편, 『공산군의 유격전법과 경비와 토벌』(서울: 병학연구사, 1948),

가 발행한 『대한경찰전사 제1집 - 민족의 선봉』(서울: 흥문출판사)이 있다.

부분적으로 4·3을 언급한 이 책은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환경으로 말미암아 해방 직후부터 국내에서 가장 공산분자들의 도량이 막심하였고, 또 따라서 그들의 선공과 공갈 협박 등으로 도민(島民)의 사상은 자못 불온하여 전도(全島) 내에 무거운 저기압이 배회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면초가의 고립상태에 빠져 형세는 불리하여 치안은 누란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대소(大小)폭동을 번창하게 접종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1)</sup> 한국전쟁 시기 발행된 이 책은 경찰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책에 나온 내용은 그대로 다른 관변자료에도 인용된다. 이 책에는 “제주경찰감찰청 및 제주경찰서를 포위 침습한 기세를 취하게 되자 경찰은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발악 항거하는 그들에 대하여 시위 발포를 한 결과 수명의 사상자를 넘으로써 일단 진압되었으나 혼미한 그들은 경찰이 양민을 함부로 총살하였다는 허울 좋은 허전(虛傳)을 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2)</sup> 사건의 주요 원인인 4·3 이전 경찰의 대량 검거, 잇단 고문치사사건, 서북청년단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언급은 물론 3·1사건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은 경찰의 4·3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이후 각종 관변자료에도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육군본부가 1954년 펴낸 『공비토벌사』도 『대한경찰전사 제1집』의 4·3 부분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sup>13)</sup> 이들 책이 4·3을 단편적으로 다뤘던데

pp.16-18: 경찰교양협조회가 펴낸 책자에도 유격전을 “일체(一切) 혁명성을 띤 전쟁의 필요한 조성(組成)부분으로서 더구나 광대한 영토에서 작전하는 민족해방전쟁에 있어서 광범한 민중성을 가진 유격전쟁의 발전은 필요한 것이며 또 필연적인 것”이라며 “피압박 민족 혹은 인민과 그들을 압박하는 자 사이의 모순이 발전해 일정한 역사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불가피적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적화전술: 조국을 쪼먹는 그들의 흉계』(서울: 경찰교양협조회, 1949), p.1

11) 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간행회, 『대한경찰전사 제1집 - 민족의 선봉』(서울: 흥문출판사, 1952), p.97.

12) 앞의 책, p.98.

비해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가 1967년 발간한 『한국전쟁사 제1권 - 해방과 건군』은 비교적 자세하게 4·3을 다루고 있다. 경비대의 자체 기록 및 증언 자료를 토대로 한 이 책은 '제주도 폭동과 토벌작전'편에서 '제주도 폭동 <4·3사건>의 군사적 배경, 제9연대의 해체와 제11연대의 작전, 박진경 대령의 토벌작전, 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피살, 제11연대의 토벌작전 경과, 제9연대의 재편과 토벌작전, 제2연대의 3단계 작전' 등으로 나눠 기록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이 책도 기존의 4·3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철수시 산중에 매몰한 무기를 모집하여 이것으로 무장하고 군사훈련은 팔로군 출신들이 담당하여 중국에서 사용한 유격전으로 자못 그 기세는 당당하였다", "도민 8할이 좌경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인민공화국이나 다름 없었다"는 등 상당부분을 왜곡했다.<sup>15)</sup>

이러한 책과는 달리 4·3 당시 정보장교였으며, 훗날 정치학자가 된 김점근이 1973년 펴낸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에서는 다소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sup>16)</sup> 그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4·3을 서술하면서 4·3의 배경, 전개, 실패요인 등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지어 서술하였다.<sup>17)</sup>

그는 "4·3폭동은 남로당의 기본조직과 제주도의 제한된 특수환경, 그리고 미군정과 본토인,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에 대한 경원(敬遠) 등의 조건과 더불어, 3·1절의 민중과 경찰과의 충격충돌, 그리고 서청 등 반공청년단체에 대한 증오감정 등이 가세된 긴장상황을 효과적으로 선동, 조직, 동원하여 이를 교묘하게 남로당의 5·10선거반대 저지투쟁에 합치시킴으로써 폭발된 사건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8)</sup> 그는 남로당이 4·3을 '미제국주의'에 대한 항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정기관과 미군부

13) 육군본부, 『공비토벌사』(서울: 육군본부, 1954), p.10.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 해방과 건군』(서울: 동 위원회, 1967), p.437-451.

15) 앞의 책, pp.437, 440.

16) 김점근,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서울: 박영사, 1973), pp.142-172.

17) 박찬식, 앞의 책, p.482.

18) 김점근, 앞의 책, p.154.



대, 미군정요원에 대한 한 건의 습격사건은 물론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남로당과 미국 그리고 미군정, 남·북로당의 파쟁 등에도 함축성 있는 암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sup>19)</sup>

그의 분석은 기존의 관변 자료에 나온 4·3논의에서 탈피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4·3 인식은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관변 측의 4·3 논의에서는 어느 책에서건 군·경의 가혹행위, 대량학살에 대한 부분을 기술한 책은 없다.

## 2) 민간영역의 4·3 논의

국가권력이 4·3 논의를 독점한 시기 국내에서 4·3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좌경용공'으로 몰리던 때였고, 연좌제가 실제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4·3의 기억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시기 민간영역의 4·3 논의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이뤄졌다. 일제 강점기 이래로 일본은 제주도민들의 또다른 삶의 공간이었으며, 4·3 당시에는 제주사람들의 피난처 구실을 했다. 1963년 제주출신 재일동포 김봉현·김민주는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 자료집』(대판: 문우사)을 일본에서 출판하였다. 무장투쟁 관련자들이 쓴 이 책은 '4·3=해방운동=반미자주화투쟁'으로 보고 있다. 한림중학원과 제주제일중학교(오현중 전신)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김봉현은 좌익활동을 하다 일본으로 피신했다. 김봉현이 일본으로 건너간 시점은 1947년 여름경이나 늦어야 1948년 2·7사건 즈음으로, 4·3 발발 전에 제주를 떠났다. 4·3 당시 조천중학원 학생이었던 김민주는 4·3 발발 후 입산했다가 1949년 4월경 붙잡혀 인천소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 형무소 문이 열리자 탈출해 일본으로 피신했다.<sup>20)</sup> 이 책은 4·3 주도세력과 참여자,

19) 김점곤, 앞의 책, p.167.

20) 김봉현은 일제 때 일본 간사이대학과 메이지대학에서 역사학과 지리학을 공부했다.

피해자 등을 광범위하게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민이 '무장투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과 전개과정 등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4·3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또 양민학살의 지역별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이후 현장 증언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책의 서문을 쓴 김봉현은 4·3을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구국 무장투쟁의 하나로써 빛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투쟁"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당시 무장투쟁 주도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sup>21)</sup>

김봉현은 4·3 30주년을 맞은 1978년 『濟州島 血の歴史-〈4·3〉武裝闘争の記録』(東京: 國書刊行會, 1978)을 출판했다. 이 책은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김봉현의 4·3에 대한 인식과 자료집 집필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서문에서 "이 비참한 대사건은 당시 모든 보도가 금지돼 외부 특파원이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채 끝났다. - 제2차 대전중에 나치스·독일이 저질렀던 '아우슈비츠'에서의 학살, 일본군의 '남경대학살', 전후에 일어난 대만의 '2·28'학살, 그리고 세계를 흔들었던 남베트남의 '밀라이마을' 학살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완전한 잔학성을 보여주는 살육이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섬에서 일어났던 것이다"고 서술하고 있다.<sup>22)</sup>

그는 1978년 이 책을 서술하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의 난징대학살, 대만 2·28사건, 베트남의 밀라이학살사건을 거론할 정도로 당시 아시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

그는 4·3 증언자를 만나기 위해 북해도까지 갈 정도로 집필에 공을 들였다. 김종민, 앞의 책, p.362, 박찬식, 앞의 책, p.482: 김봉현이 이 책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는 2년 동안에 걸쳐 책을 집필했으며, 당시 투쟁에 참가했던 투사들과, 또는 보고 들은 수많은 재일 도민들과의 담화를 통해 얻은 자료 가운데 일부만을 추려내 엮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민주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3천여명에 이르는 일본으로 건너간 3천여명의 4·3경험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고 밝힌 바 있다.

21) 김봉현, 『제주민중항쟁Ⅱ』(서울: 소나무, 1988), 서문.

22) 김봉현, 『濟州島 血の歴史-〈4·3〉武裝闘争の記録』(東京: 國書刊行會, 1978), p.1.

그의 4·3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어떤가. 그는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봉기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가 이민족의 지배나 권력의 확장에 대항하는 투쟁의 발걸음에 있는 이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그것이 행인지 불행인지는 차치하고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애국 인민이 압제자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며 4·3 무장봉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sup>23)</sup> 그는 당시 운동을 지도했던 전위세력 주체의 취향성, 상대방의 역량에 대한 과소평가와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투쟁 개시의 시기와 방침 등의 전략 등 4·3 무장투쟁 개시에 있어서 전술상의 많은 오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4·3의 실태에 대해 첫째, 미군정의 압정과 이승만 정권의 포학이 도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역사적 사실, 둘째, 군·경 토벌대가 무기가 없던 별거벗은 민중에 대해 일방적인 잔학 행위를 했다는 사실 등 2가지 측면을 지적했다.<sup>24)</sup>

그는 “미국은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다. 이 섬이 ‘반미·반이’항쟁의 근거지로 되는 것은 지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태의 진전을 지극히 중요시해서 남조선 어느 곳보다도 게릴라전이 왕성한 제주도를 첫째로 ‘투망작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전후 아시아에서의 반게릴라전의 첫 시험장으로서 미국제의 근대무기로 무장한 수개사단의 대병력과 비행기와 구축함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빨갱이 사냥’전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체노사이드(이민족 대량학살) 작전으로, 삼광정책(불태워 죽이고, 쏘아 죽이고, 약탈해 죽이는)이 그러한 일이었다. 말하자면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비전투원예의 무차별 공격과 대량학살’이 4반세기전 이미 제주도에서 주저함도 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베트남전에서의 ‘체노사이드’와 ‘새디즘’(가학)의 원형이라고도 하는 전략촌, 축성, 고엽작전 - 초토화, 섬멸작전이 실시됐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sup>25)</sup> 이 책을

23) 앞의 책, pp.1-2.

24) 앞의 책, p.3.

쓴지 30년 뒤 연구자들이 탐색하는 연구주제를 그는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인식하고 있었다.

김봉현·김민주는 8·15 이후 자발적인 조국건설운동에서 4·3봉기에 이르기까지의 자생적, 대중적인 반제투쟁이 남로당과 연결되면서 단선반대 신식민지화 반대투쟁으로 전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가지는 한계도 분명하다. 감정적인 표현에 치우친 점, 제주도민의 열망을 과도하게 윤색한 점, 주관에 치우친 상황묘사, 논리적인 비약 등의 문제도 있다.<sup>26)</sup>

#### 4. 민간의 4·3담론 주도시기: 1987년 이후

##### 1)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는 제주4·3위원회가 간행한 『진상조사보고서』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sup>27)</sup> 『진상조사보고』를 발간함으로써 예전처럼 진상규명 운동에 맞춰 이뤄져온 4·3연구는 사실상 한 획을 그었다. 이 보고서는 4·3 전개

25) 앞의 책, p.4.

26)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침략자들이 남조선을 항구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꾸미낸 '5·10 단선' 발표되자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쌓이고 또 쌓인 원한과 증오는 드디어 폭발되어……”라거나 3.1절 기념식에 대해 “이날의 성내는 만세소리, 구호소리, 아우성소리, 총소리, 신음소리로 충만되었고, 반동들은 인민들의 거대한 위력에 압도 위축되어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었다”는 식이다. '원쑤', '개떼', '주구' 등의 표현도 곳곳에 넘쳐난다. 김봉현·김민주, 앞의 책, 서문, p.44.

27) 2000년 1월 제정·공포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위원회가 2000년 8월 출범하고 2001년 1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발족돼 본격적인 자료수집 및 조사에 들어갔다.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자료수집기간 동안 정부기관 발간물, 판결문, 미국자료, 증언자료 등 1만594건의 자료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10월 보고서를 확정했다. 제주4·3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서울: 동위원회, 2003), pp.43-55.

과정, 피해실태 등 4·3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한국 역사상 과거사 관련 첫 공식 조사보고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제주4·3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발발원인과 전개과정, 인명피해 실태, 군·경 피해, 서북청년단의 행태, 연좌제 및 고문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과거사 진상규명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보고서는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봉,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4·3의 발발 배경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실었다. 이어 보고서는 집단 인명피해와 관련해 제9연대장과 제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으며,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sup>28)</sup>

제주4·3위원회는 자료수집 기간에 수집한 자료를 엮어 『제주4·3사건 자료집』 1~11권(2002, 2003)을 발간했다. 강경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철, 국무회의록, 폐간된 신문의 기사, 미국 관련 자료, 사진 등의 새로운 자료가 상당수 포함된 이 자료집은 그때까지의 4·3관련 문서자료를 망라해 4·3연구의 토대를 한층 강화했다.<sup>29)</sup>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4·3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폭동’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엄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sup>30)</sup>

28)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p.536-540.

29) 장윤식, 앞의 자료집, p.385.

30)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2006년 4월 3일 제주평화공원에서 열린 위령제에도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됐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 대통령의 위령제 행사 참석은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제주4·3 사건을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4·3사건은 사건을 주동하고 개입한 남로당의 사주를 받

## 2) 군·경의 4·3 인식

민주화운동 시기 이후에도 군·경의 4·3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88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펴낸 『대비정규전사』는 “국방경비대의 공비소탕작전은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 폭동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제주도 지구에서 전개된 것이 처음이었다”며 4·3을 ‘폭동’이며 ‘게릴라전’의 시초로 보고 있다.<sup>31)</sup> 이 책은 기존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펴낸 4·3관련 부분을 군측 자료를 동원해 상황도(요도)나 연대 편성표, 육군 특수부대인 무지개부대 작전(1953. 2.3~5.1) 시기 제1~7호의 작전요도를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도 군 또는 경찰의 과잉진압, 가혹행위, 무차별 살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히 제2연대 주둔 시기에 일어난 북촌리 학살 사건 등 대규모 학살사건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선무공작으로 민심을 수습했다고 밝히고 있다.<sup>32)</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제주4·3특별법에 제정되고 제주4·3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인 2002년에도 토벌작전에 참가했던 군·경 출신들의 증언과 정부 문서, 작전 사료를 기초로 『4·3사건 토벌작전사』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이 책은 제주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한 예로, “송요찬 연대장이 지휘한 제9연대(재편)가 주민에 대한 대량 피해를 발생시켰느냐?”는 질문에 조○○, 진○○씨

---

은 사람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03년 당시 국방부는 4·3사건이 무장폭동이라는 입장이었고, 수정을 요청한(4·3관련 단체)쪽은 무장봉기로 표기해달라고 했다”며 “(합의가 어려워) 양쪽의 입장은 그대로 둔 채 소요사태로(절충해) 표기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10월 8일 제주에서 ‘4·3 왜곡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국방부는 제주4·3을 ‘남로당의 폭동 지시에 의해 발생한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 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해 제주도를 좌익 반란의 섬, 도민을 반란의 후손으로 낙인찍는 등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 상회 국방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한겨레』2003. 11. 1: 2006. 4. 4: 2008. 10. 7: 10. 9.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동위원회, 1988), p.47.

32) 앞의 책, pp.47-75, 244-256.

는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였다"라거나, "제주4·3사건 당시 중산간 마을에서 포고령을 위반하여 군·경이 일부 불을 지른 것은 작전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었지만, 무장공비들이 보복의 일환으로 마을에 불을 질렀던 예도 있었다"고 기록하는 식이다.<sup>33)</sup> 군·경은 대량학살을 자행하지 않았고, 군·경이 불을 지른 것은 '작전상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제주도경찰국이 4·3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 펴낸 『제주경찰사』는 4·3을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좌익분자들의 만행에 의한 폭동사건"으로 규정하고, 북촌리 학살사건 등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등 심각한 사실 오류를 범했다. 이어 제주경찰청은 2000년 『제주경찰사』(개정판)를 펴냈으나, 이 책도 "1948년 4월 3일 평화의 땅에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좌익분자들의 만행에 의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가리켜 제주도의 4·3폭동사건"이라고 규정했다가 4·3단체와 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sup>34)</sup>

### 3) 민간영역의 4·3 논의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유족들의 증언이 하나 둘 나오면서 민간영역의 4·3 연구는 붓물처럼 쏟아졌다. 이 시기 이후 진상규명 차원에서 유족들의 증언채록을 중심으로 하던 4·3 연구는 최근에는 4·3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고 심층적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4·3의 학문적 접근에 앞서 이의 연구를 추동하게 한 문화예술인·학생·활동가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선구적인 것이었다.<sup>35)</sup> 이 사건 연구의 가장 큰 흐름은

33)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4·3사건 토벌작전사』(서울: 동연구소, 2002), p.136.

34) 『제민일보』 2005, 5.4.

35) 제주대 총학생회는 1986년 4월 3일 학생회관 1층에 처음으로 4·3 분향소를 설치했다가 학교쪽의 철거 요구로 몇시간 만에 학생회 사무실내로 옮기기도 했다. 다음 해인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직전 4월 3일의 제주대 총학생회가 붙인 4·3 대자보는 대학은 물론 제주 사회의 4·3운동의 전환점이었다. 이 사건으로 송영란 총여학생회장장과 김병현 사회과학대 학생회 홍보부장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4월 18일 풀려났다. 미디어제주, 『제주민주화운동사-타는 목마름으로』(제주: 미디어제주, 2007).

1980년대 후반까지 금기시되고 왜곡되었던 부분을 바로잡고 유족들의 신원(伸冤)운동을 전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민주화운동 시기 이후 민간영역의 4·3연구는 대체적으로 민간연구단체 및 개인별 연구, 언론의 4·3 논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민간연구단체의 활동이다. 1989년 5월 10일 발족한 제주4·3연구소는 창립 이후 증언집 『이제사 말함수다』 I, II(서울: 한울, 1989, 1990)를 펴낸 데 이어 『4·3장정』 통권6권, 무크지 『제주항쟁』(1991)을 발간해 증언과 자료 발굴을 통한 학술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였다. 1991년에는 『제주신보』(1947.1.1~1948.4.20)를 발굴 출판해 '4·3의 배경' 연구에 기여를 했다. 4·3 관련 세미나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은 『4·3과 역사』도 2002년부터 해마다 발간하고 있다.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입증하는데 수형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은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서울: 역사비평사, 2002)과 4·3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후유장애인 등을 모아 펴낸 『그들속의 4·3 - 사(死)·삶과 기억』(서울: 선인, 2009)은 나름대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4·3경험자들의 신원(伸冤)에 일조하였다. 증언의 주관적, 비밀관성, 선택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언의 교차검토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역사적 기억을 재구성하고 4·3의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1000인 증언채록사업'(2004~2010)은 대학 연구기관이나 민간차원의 연구기관을 망라하고 국내에서는 시도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대규모 구술채록 프로젝트다.<sup>36)</sup> 이는 노령화된 4·3 경험세대들의 4·3경험을 정리하는 프로젝트로, 여기에는 피해자였던 일반 도민만이 아니라 진압세력이었던 군과 경찰, 무장봉기에 참여했던 도민들까지 망라했다.

pp. 47-48, 112-132.

36) 이 증언채록사업의 목적은 증언채록 사업의 목적은 ① 4·3의 실상을 담은 증언 자료의 축적 ② 반세기 넘는 세월의 공포와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왔던 체험자들의 심리적 고통 해소 ③ 증언 축적을 통한 4·3사료관의 콘테츠 활용 ④ 역사교육자료 활용 등이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연구소회보』통권 42호, 2007, p.6.



둘째,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와 4·3 관련 서적 발간이 활성화됐고, 4·3 경험자들의 책자도 발간됐다. 4·3 경험자들에 대한 증언채록은 민간연구단체나 개인 연구자를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4·3연구의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4·3 경험세대들의 구술채록을 모았으며, 경험자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4·3논의를 전개했다.

1988년 출판된 오성찬의 『한라의 통곡소리』(서울: 소나무)는 4·3 증언채록작업의 결과물이다. 1988년에 나온 조남수의 『4·3진상』은 체험과 증언을 바탕으로 씌어진 책으로 4·3 재조명작업이 이뤄지는 시기에 우익적 관점에서 접근했다.<sup>37)</sup> 그리고 남로당 대정면책을 역임하였던 이운방의 증언, 유격대에 가담하여 4월 3일 대정지서를 습격하였던 김○○의 증언 등은 무장투쟁 지도부의 진실을 조금이나마 드러냈다.<sup>38)</sup> 무장대 활동을 하다가 일본으로 도피한 제일동포의 구술채록집도 나왔다.<sup>39)</sup>

특히 개인연구자들의 연구는 초기 진실 알리기 차원에서 벗어나 학문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4·3연구를 발전시켰다.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의 개인적 연구들은 주로 4·3 전개과정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4·3 연구의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3 발발 50주년을 맞아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펴낸 『제주4·3연구』는 정치학, 역사학, 법학, 의학, 문학, 인류학 등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학문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4·3연구의 나침반 구실을 했다.<sup>40)</sup> 또 1998년에 치러진 학술문화사업 가운데 잃어

37) 이밖에 4·3을 '폭동론'으로 보는 책들은 다음과 같다. 박서동,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제주: 월간관광제주, 1990); 고문승, 『박헌영과 4·3사건』(제주: 신아문화사, 1989); 고문승, 『제주사람들의 설움』(제주: 신아문화사, 1991).

38) 박찬식, 앞의 책, p.484.

39) 김창후, 『자유를 찾아서: 김동일의 역사와 해바라기의 세월』(서울: 선인, 2008).

40)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제주4·3연구』(서울: 역사비평, 1999)에 실린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인덕, 「1920년대 후반 재일제주인의 민족해방운동: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서중석,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김순태, 「제주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정해구, 「제주4·3항쟁과 미군정 정책」; 임대식, 「제주4·3항쟁과 우익청년단」;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4·3의 담론정치」;

버린 마을 조사사업, 국내외 학술대회 등은 그때까지의 4·3 논의를 종합함으로써 4·3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sup>41)</sup>

박찬식은 4·3의 도화선이 된 3·1사건과 형무소 재소자 문제, 북한의 4·3 인식으로까지 4·3연구의 폭을 확대했다.<sup>42)</sup> 그는 당시 제주 민중의 지향점은 주변부에 처해 있는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제주도에 끼친 세계 냉전체제, 한반도 중앙권력의 물리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두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3)</sup> 제주4·3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4·3 당시 계엄령에 대한 법학자들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법 제정 이후에는 군법회의 재판의 불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수형인들이 국가폭력에 의한 4·3 희생자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sup>44)</sup>

위령의례 등 4·3관련 행사들을 통해 기억이 어떻게 의례에 투영되어 있는가를 고찰하고, 한국사 속에서 4·3을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있다.<sup>45)</sup> 서중석은 제주4·3사건을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축약해 놓은 지도라고 정의하고, 제주도에서 민간인 3만명 내외가 희생된 것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sup>46)</sup>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황상익, 『의학사 측면에서 본 4·3』: 김종민, 「4·3 이후 50년」: 박명립,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연구: 제주4·3과 한국현대사」.

- 41) 1998년 제주에서 열린 '동아시아 평화·인권 심포지엄'은 순수 민간단체의 행사로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학자와 법조인, 문화예술인, 활동가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현 동티모르 대통령)와 일본의 중의원 등도 참가함으로써 4·3을 국제화시키는데 기여했다.
- 42) 박찬식, 「북한의 '제주4·3사건'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0집(2005): 박찬식, 「제주4·3사건 관련 목포형무소 재소자 연구: 행방불명자 규명을 중심으로」,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제30집(2007).
- 43)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pp. 492-493.
- 44) 이경주,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긴급권 - 제주4·3 수형자 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제2호, 2002, pp.179-199: 이재승, 「소위 제주4·3관련 군법회의 재판은 재판인가?」, 앞의 책, pp.200-217.
- 45)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전남대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3집 제2호(2003): 현혜경,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 46) 서중석,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제주4·3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9), p. 143

담론의 하나로서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이론에 접목시켜 4·3을 '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연구의 한 흐름이다. 권귀숙은 4·3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량학살 사건으로서 희생자의 다수가 비무장 민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왜 이들이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토벌대'만이 아니라 '무장대'도 민간인에 대한 가해자 집단에 포함시켜 두 집단간의 상호 배제정책과 권위화, 비인간화 등을 통해 학살담론을 이끌어내고 있다.<sup>47)</sup> 최호근은 "제주4·3의 본질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집단학살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엔의 제노사이드 협약을 통해 제주4·3사건을 설명하고 있다.<sup>48)</sup>

셋째, 언론의 4·3논의다. 진상규명 차원에서 사건의 전개를 통사적으로 기록한 제민일보사의 「4·3은 말한다」는 10여년에 걸친 연재물을 묶은 것으로 국내외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4·3특별법 제정운동에도 기여했다.<sup>49)</sup> 방송사들의 4·3 기획은 해마다 4·3 시기에 맞춰 진상규명과 재일동포 사회, 유해발굴, 다큐투어리즘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 시기 이후 4·3논의는 증언채록집을 시작으로 4·3의 진실 드러내기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4·3 연구가 활성화됐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4·3 연구는 4·3 발발의 원인과 전개과정, 정치·사회적 결과 등 거시적 접근에서 무장투쟁 주체세력, 피난민, 아동문제로 미시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량학살과 제노사

47) 권귀숙, 『기억의 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48) 최호근, 『제노사이드-학살과 은폐의 역사』(서울: 책세상, 2005), pp. 385-386.

49) 『제주신문』은 1989년 4월 3일을 맞아 「4·3의 증언」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말 『제주신문』 사태로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제민일보』 창간과 함께 「4·3은 말한다」로 이어졌다. 「4·3은 말한다」는 1990년 6월 2일부터 1999년 8월 28일까지 456회에 걸쳐 연재됐다. 이 연재물은 4·3의 시기구분을 1945년 8월 15일부터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된 1954년 9월 21일까지를 10기로 나눠 학술적 성과 국내외 자료, 증언을 종합적해 실증적으로 4·3을 분석하고 있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5권(서울: 전예원, 1994~1998).

이드로의 접근, 기억담론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4) 학위논문을 통해 본 4·3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3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반공독재체제에서는 불가능했으며, 한국 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진행됐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학계의 연구는 4·3 발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고, 전개과정의 사실들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1988년 동시에 나온 양한권의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와 박명림의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가장 앞선 4·3연구논문이다.<sup>50)</sup> 더구나 두 논문은 '배경'과 '전개과정'으로 각각 나뉘으로써 4·3연구의 기초를 다졌다.

박명림은 4·3을 국가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산물로 보고 권력의 형성 과정, 주체, 행사 방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무겁고 복합적인 주제임을 전제하면서 국가형성과정은 필연적으로 폭력의 독점, 정당성을 다투는 세력들의 체계적인 배제과정, 아울러 영토 내의 인민들에 대한 국민적 통합, 국민형성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sup>51)</sup>

2000년대 들어 제주4·3연구소가 주한미군보고서와 제주도과 관련된 미국무부 문서를 찾아내 번역한 것은 4·3과 미국의 관계를 밝히는데 역할을 했다.<sup>52)</sup> 이를 바탕으로 4·3과 미국의 관계와 초토화 작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sup>53)</sup> 공식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던 남로당과 제주도

50)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박명림,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외과 석사학위 논문, 1988.

51)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제주4·3과 한국현대사」,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9), p. 445.

52)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보고서』(제주: 제주도의회, 2000),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제주: 각, 2001).

민과의 관계 등 무장투쟁 주도세력에 대한 연구와 피난민 수용시설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sup>54)</sup> 내전과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노약자, 특히 아동에 대한 학살은 어떤 상황이든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연구도 있다.<sup>55)</sup> 김상기는 제주4·3의 폭력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폭력 전조 단계로 이데올로기, 조직화, 타자화, 동질화 메커니즘을, 폭력 실행 단계로 고립화, 상호보복화, 광기화, 절멸화 메커니즘을, 그리고 폭력 처리 단계로 부정화와 정당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다. 김유경은 4·3 체험자를 추적해 심층면접하고, 체험자 스스로 내면의 기억을 그림을 통해 꺼내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체험자를 4·3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11년까지 나온 4·3 관련 학위논문은 박사 6편, 석사 25편 등 모두 31편이다. 2001년도부터는 거의 매해 4·3관련 학위논문이 나오고 있다. 이를 전공별로 분류하면 역사교육 7편, 사학 7편, 정치학 6편, 사회학 3편이며, 그 외에 행정학, 조경학, 미술치료학, 한국학, 신학, 언론공보학, 국어교육, 사회교육이 각 1편씩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제목	이름	대학	영역	비고
2011	제주4·3 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 - 생애사와 미술표현을 중심으로	김유경	영남대	미술치료	박사

- 53)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 54) 양정심, 『제주도 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양정심, 『제주4·3항쟁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장윤식,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은희, 『제주4·3 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 55) 허영선, 『제주4·3시기 아동학살 연구』,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6.

2010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허호준	제주대	정치	박사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윤섭	제주대	행정	박사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박영기	경희대	역사교육	석사
2009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김용철	제주대	사학	석사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 연구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김평선	제주대	정치	석사
2008	폭력 메커니즘과 기독교 담론윤리 구상: 제주4·3 사건을 중심으로	김상기	연세대	신학	박사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현해경	전남대	사회	박사
	제주 4·3 사건의 문학적 재현에 관한 연구 : 현장 체험의 유무를 통하여	박연정	국민대	국어교육	석사
2007	제주4·3 시기 아동학살 연구: 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허영선	제주대	한국학	석사
	제주도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 4·3 교육 인식	현진호	제주대	역사교육	석사
2006	제주 4·3투쟁 연구	양정심	성균관대	사학	박사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김은희	제주대	사학	석사
	제주 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분석	장윤식	제주대	사학	석사
	도계 실시를 통해 본 '제주 4·3'의 정치 사회적 배경: 1945년 8월 15일~1947년 2월 28일	현석이	고려대	사학	석사
	제주 4·3 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고성만	제주대	사회	석사
2004	제주 4·3의 초토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함옥금	제주대	사회교육	석사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이정숙	성균관대	역사교육	석사
2003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5·10 선거를 중심으로	허호준	제주대	정치	석사

2002	제주 4·3 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대량학살 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강성현	서울대	사회	석사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 연구: '제주 4·3'을 중심으로	양봉철	성균관대	역사교육	석사
2001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 - 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문순보	성균관대	정치	석사
	제주 4·3기념공원 기본계획	이상은	시립대	조경	석사
1999	제주 4·3항쟁 연구: 통일정부수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미영	연세대	역사교육	석사
1996	제주도 4·3항쟁 연구: 배경 및 성격을 중심으로	박진순	성신여대	역사교육	석사
	제주도 4·3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김대근	동의대	사학	석사
1995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양정심	성균관대	사학	석사
1994	언론의 제주4·3보도에 관한 연구	김광우	서강대	언론공보	석사
1992	4·3제주 민중항쟁연구	김광제	고려대	역사교육	석사
1988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박명림	고려대	정치	석사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양한권	서울대	정치	석사

## 5. 외국의 4·3연구현황

### 1) 미국의 4·3연구

국내외를 통틀어 4·3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첫 연구자는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한 존 메릴이었다. 그는 1975년 미국에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됨에 따라 비밀해제된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군정청 문서를 기반으로 4·3을 분석했다. 그의 *The Cheju-do Rebellion*은 본래 1975년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석사학위는

문으로 발표된 것이지만 국내에 소개된 것은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1980)에 수록된 이후다.<sup>56)</sup>

그의 논문은 미군 정보보고서 등 미국의 많은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4·3의 실상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4·3관련 내용은 1982년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도 상당부분이 포함됐고,<sup>57)</sup> 이 논문을 개정해 1989년에 연구서로 펴냈다.<sup>58)</sup>

그는 “제주도 반란은 전통적인 농민봉기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식민지적 구조를 재구축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수많은 반란 가운데 하나였다”고 분석했다.<sup>59)</sup> 그는 또 “반란은 한국에서 생존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려 했던 점령정책의 실패 증거가 돼야 한다. 전후 미국의 점령에 대항하는 폭력적인 대중적 반대는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한국으로부터 손을 떼기가 쉽게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sup>60)</sup> 그는 또 “게릴라와 경비대 간의 희생자수의 불균형이나 제한적인 무기수는 정부군이 가공할 만한 과잉살해에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sup>61)</sup>

존 메릴의 4·3 분석은 탄탄한 근거 위에 과학적인 해석을 가한 첫 연구 성과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제주도의 농민봉기의 역사적 맥락, 해방 이후 제주도내 좌우세력의 대립구도, 4·3의 전개과정 등을 구조적인 시각 속에서 고찰했으며, 4·3의 발발 원인을 제주도의 분리주의적 전통,

56) 국내에서 이 논문이 본격적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출판된 자료집 노민영, 『잡들지 않는 남도』(서울: 온누리, 1988)와 아라리연구원, 『제주민중항쟁: I』(서울: 소나무, 1988)에 번역, 수록되면서부터이다.

57) John Roscoe Merrill,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University of Delaware, Ph. D. 1982.

58)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59) *Ibid.*, p.82.

60) *Ibid.*, pp.82-83.

61) *Ibid.*, p.123.



제주도민들의 누적된 불만, 5·10선거 때까지 제주도의 정치화된 분위기로 분석한 그는 4·3 무장봉기는 지역적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남로당 중앙당 지도부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주목할만한 사실로서 봉기 또는 반란의 지속성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투쟁이 1년 이상이나 계속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농민봉기와도 매우 달랐다”고 언급했다.<sup>62)</sup> 그러나 그는 게릴라세력과 한국 군·경간의 대립구도로만 풀어냄으로써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다른 한국현대사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는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에서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강고성과 지속성, 4·3을 부분적으로 언급하면서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지속적이고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과잉진압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sup>63)</sup> 그는 또 4·3 발발 50주년을 맞아 재일동포들이 주최한 4·3 세미나에서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4·3과 미국의 관계를 조명했다.

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주한미군정은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였고, 비밀협정에 의거해 미국은 1948년 8월 15

62) KBS 6.25 40주년 특별제작반 편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상(서울: KBS 문화사업단, 1991), p.97.

63) 커밍스가 제시한 인민위원회의 발전과 지속성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에 인구가 감소했다가 해방 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 ② 소작농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으며 지주의 힘이 무너졌거나 약했던 지역으로 농민들이 어느정도의 독립성과 견제수단을 갖고 있던 지역 ③ 일제통치와 미군정의 정치적 공백기간이 길었던 지역 ④ 통신과 운송시설이 비교적 열악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장악한 지역 ⑤ 역사적인 농민의 급진성 사례(1930년대 적색농민조합의 존재여부)가 있었던 지역 ⑥ 비교적 분화된 직업구조 ⑦ 상당한 기간 동안 좌익도 우익도 지배적이 못하면서 우세한 좌익이 온건한 정책을 취한 정치적 복합성이 존재한 지역 등이다. 제주도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위의 사항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인민위원회가 튼튼한 근거지를 확보했으며, 1948년까지 섬 전체를 통제했고, 2차 대전 후 아시아에서 가장 잔인하고 지속적이며 강력한 소탕 작전이 전개됐다.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상(서울: 청사, 1986), p.204.

일부 1949년 6월 30일까지 남한 군과 국립경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미국이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미국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면 제주도가 첫 번째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sup>64)</sup>

이에 대해 전통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구자로는 군사사 연구자인 알란 밀레트(Allan R. Millett)가 대표적이다. 그는 *The War for Korea, 1945-1950: A House Burning*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미군 문서 등을 이용해 4·3을 분석하면서, 남로당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자들과 우익단체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 민족주의 정부간의 게릴라전으로 인식하고, 4·3을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sup>65)</sup> 밀레트가 있는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브라이언 깁비(Bryan Robert Gibby)는 *Fighting in a Korean War: The American Advisory Missions from 1946-1953*에서 1948년 4월 시작돼 1950년 3월까지도 끝나지 않은 잊혀진 내전 시기에 한국군에 정체성을 심어주고 육성한 미 고문관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는 농민 게릴라들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반란을 뿌리뽑기 어려웠다는 커밍스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에 있던 고문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9연대가 게릴라들을 진압하거나 대결하려는 의지나 지도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sup>66)</sup> 같은 대학에서 4·3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손경호는 4·3의 기원과 관련해 전남도당이 미군정에 저항하려는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의 의도를 이용함으로써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나 중앙당이 아니라 남로당 전남도당이 4·3 발발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67)</sup> 그러

64) Bruce Cumings,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the Cheju Uprising*, paper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April 3, 1948 Cheju Rebellion, Tokyo, March 14, 1998.

65)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45-1950: A House Burning*(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66) Bryan Robert Gibby, *Fighting in a Korean War: The American Advisory Missions from 1946-1953*, The Ohio State University, Ph.D., 2004.

67) Kyeongho Son, *The 4-3 Incident: Background, Development, and Pacification, 1945- 1949*, The Ohio State University, Ph.D., 2008.

나 이들의 전통주의적 접근방법은 남로당이나 공산주의자들에 분석이 치우친 나머지 군·경의 가혹행위 또는 미고문관과 주한미군 수뇌부, 주한 미대사관의 역할 분석을 소홀히함으로써 4·3의 한 측면만을 분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주4·3위원회를 중심으로 4·3 진상규명활동을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거사 규명운동과 비교한 4·3담론에 대한 논문도 나왔다. 김현준은 2008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외국의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4·3 진상규명운동의 여정과 함께 제주4·3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한국의 이행기 정의 운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sup>68)</sup> 그는 이 논문에서 이행기의 정의를 5개의 국면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sup>69)</sup>

연도	성관	주요 행위지	주요 활동	
1단계	총체적 탄압 I (1954~1960)	이승만	무	무
	제1국면 (1960~1961)	장면	학생: 지방지(제주신보) 유족: 지역엘리트 (국회의원)	국회 양민학살조사특별위원회(제4대 국회)
	총체적 탄압 II (1961~1979)	박정희	무	무
	제2국면 (1979~1987)	전두환	작가: 문화예술인; 학생 및 지식인 재일동포	현기영의 「순이삼촌」 학생과 활동가들의 지하 추모활동과 스터디그룹
2단계	제3국면 (1987~1992)	노태우	4·3연구소; 제주민예총; 지역언론(제민일보) 학생, 유족, 시민사회단체, 방송(MBC)	4·3위령제; 「제민일보」 의 「4·3은 말한다」, 연구 및 자료 발굴; 다량위굴 유해발굴  학살과 피해자에 대한 개인조사

68) Hunjoon Kim, *Expansion of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Cause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h.D., 2008.

69) *Ibid.*, pp.133-134.

	제4국면 (1993~1998)	김영삼	도의회 4·3위원회 지지 네트워크(4·3연구소, 민예총); 학생: 언론; 4·3유족회	제주도의회 공식조사; 합동위령제; 4·3청원운동
3단계	제5국면 (1998~2000)	김대중	범국민위원회(서울); 50주년위원회(도민연대) (제주)	50주년 기념사업; 4·3특별법 제정운동

## 2) 일본의 4·3연구현황

일본은 앞서 밝힌 바 있듯이 4·3 당시 제주인들의 도피처이며, 일제강점기 때 건너간 제주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4·3을 생각하는 모임' 등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유족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 출신 재일동포 문경수(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가 펴낸 『濟州島現代史 - 公共圏の死滅と再生』(東京: 新幹社, 2005)은 사건의 경과, 진상규명운동, 특별법 제정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제주도의 현대사는 4·3으로 상실됐던 '공공권(public sphere)'을 회복하는 노정이었다"고 주장한다. 4·3으로 인해 제주의 공공권은 사멸됐으며, 이후 1990년을 전후하여 분출한 탐동매립,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등 주민운동이 공공권 회복의 징표라는 것이다. 그는 해방 직후 나타난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권력의 공백기라는 특이한 상황 하에 성립한 '공공권'의 위치에 있었고, 4·3은 이렇게 성립된 공공권을 지키기 위한 민중들의 자립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이 타도되고 분쇄된 비극이라고 해석했다.

무라카미 나오코는 미국 메릴랜드대학 프란게문고(Dr. Frange Collection)에 소장된 1948년부터 1949년 10월 말까지 재일본 조선인이 발간한 신문자료를 입수해 당시 재일조선인의 4·3인식을 분석한 바 있다.<sup>70)</sup> 이

70) 프란게문고는 일본에 있던 GHQ가 일본에서 검열제도를 실시한 1945년 9월부터 1949년 10월 말 사이 수집된 간행물로, 자료적 가치에 주목한 G. W. Prange가 미국 매

자료를 통해 4·3 학살이 자행되던 시기인 1949년 1월 제주도 출신자들의 집단 주거지역인 오사카 이쿠노쿠에서 '재판 제주도 대정면 친목회'가 주최한 '인민학살반대추도회'를 시작으로 각 출신지역별 집회를 열었으며, 2월 6일 조련 나카가와초등학교에서 1만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구국투쟁 희생자 추도인민대회'가 열린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sup>71)</sup> 이와 함께 일부 연구자들이 해방 직후 제주도 출신자들에 대한 생활사 조사를 통해 4·3을 연구하고 있다.<sup>72)</sup>

## 6. 새로운 과제의 탐색

### 1) 4·3연구의 접근

진실규명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그러한 교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지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4·3 연구와 해석은 개별 연구자의 관심과 전공분야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화할 수 있다. 4·3이 지역적 틀을 뛰어넘어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사이드, 평화문제 등 이론적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4·3이 제주지역에서 벗어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

---

릴랜드 대학에 보관한 자료군이다. 프란게 문고에 소장돼 있는 자료 가운데 잡지, 신문, 통신이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이 1992년부터 매릴랜드 대학과 일본 국회도서관의 공동기획으로 이뤄져 1997년에 작업이 끝났다. 무라카미 나오코에 따르면, 프란게 문고 가운데 제일조선인들이 발행한 신문 중 27개 신문에서 400건 이상 4·3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무라카미 나오코, 「프란게문고 내의 제일조선인 발행 신문에 나타난 제주4·3인식(1948~1949)」, 『4·3과 역사』 제5호(제주: 제주4·3연구소, 2005), pp.292~293.

71) 무라카미 나오코, 앞의 책, pp.312-313.

72) 藤永 壯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생활사조사는 『大阪産業大學論集 人文·社會科學編』제102호(2000, 10)부터 2010년 6월 현재 8편이 실렸다.

와 함께 4·3 이후의 4·3연구가 필요하다. 4·3 이후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 가족연구, 인구이동 등 마을과 가족 단위 중심으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료와 연구방법론을 통해 앞으로의 4·3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적 차원의 연구를 들 수 있다. 4·3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무장봉기 결정과정, 사회경제적 상황, 미군정과 제주도민의 관계, 미국의 책임규명, 수형인, 행방불명인, 무장대(제주도인민유격대)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4·3의 실제적 진실을 위해 필요하다. 또 4·3과 한국전쟁이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 4·3 이후 지역사회의 정치, 사회경제,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분석과 해석도 제주 현대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둘째, 국내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4·3과 국내 정치집단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승만 정부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관계,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는 중앙정치세력의 4·3 인식, 남로당 중앙당과 제주도위원회와의 역할관계 등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차원의 연구영역 확대도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국가들의 국가건설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폭력과 상관계, 그리고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4·3의 의의와 연구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외 여러지역의 근현대 시기 민간인 학살 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넷째,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량학살의 논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대게릴라전에서 나타나는 강제이주, 전략촌 건설, 초토화작전 등은 필리핀, 베트남, 과테말라 등에서 보듯이 공통적 현상이었다. 대게릴라전으로서의 4·3과 이들 지역간의 비교연구도 한 방법이다. 다섯째, 4·3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서의 번역작업과 기념사업도 적극 요구된다. 이는 오국의 연구자들이 4·3연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4·3 기념사업을 평화교류의 계기로 을 마련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 등지와 평화인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술교류와 평화인권 실천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검

토돼야 한다.

## 2) 구술채록과 채록의 기록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4·3연구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구술사다. 사건 발생 63년이 지난 지금 4·3 관련 사료는 많은 발굴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은 구술채록을 통한 역사의 껍데기추기가 될 것이다. 이미 4·3체험세대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억 또한 사라지고 있다.

연구자는 물론 역사의 경험 당사자들과의 인터뷰에 참여시키는 구술사는 망각된 역사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연구자들은 당사자들의 억압된 집단 기억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더 나아가 그들의 집단 기억을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적 기억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연출한다.<sup>73)</sup>

4·3 유족들은 대부분 당시 희생된 부모형제 또는 친인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또는 '농사만 짓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4·3 때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자매는 아무 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죽었거나 행방불명됐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과연 그럴까? 유족들의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들은 '일자무식한' 사람들만 있었을까? 유족들의 자기 부정은 오히려 당시 희생자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4·3 당시 대다수의 죽음들이 억울한 죽음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희생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없었을까? 구술을 통해 이런 작업을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구술채록에는 4·3 당시 피해자인 도민들만이 아니라 진압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는 군과 경찰 출신들에 대한 구술채록도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제주4·3연구소가 진행한 '1000인 증언채록사업'이 4·3의 실체를 보여주고, 연구자들

73) 김기봉, 앞의 책, p.67.

의 연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채록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간함으로써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 3) 국내외 사료 발굴

제주4·3위원회는 국내외의 많은 공문서를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증언 축적에 비해 새로운 기록의 발굴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제주신보』와 주한미군사령부·미국무성 관련 문서 이외에는 별다른 기록은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의 정리와 자료화 작업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자료에 대한 검색과 수집은 중요하다. 해방 이후 각종 공문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 찾아야 한다.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유학자 김경종이 이승만에게 4·3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는 서한과 한국전쟁 당시 형무소 수감자들에 대한 이승만의 학살 책임을 꾸짖는 ‘이승만 성토문’을 발굴<sup>74)</sup>한 것처럼 4·3 당시 토벌작전에 나섰던 군·경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료수집과 민간부문의 사료수집도 중요하다. 정부기관의 문서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경 출신들을 직접 찾아 그들이 갖고 있는 사료들을 탐색해야 한다.

미국측 자료 발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진상조사보고서』를 비롯해 4·3의 실체나 연구에 있어서 미국측 자료가 없으면 불가능할 정도다. 4·3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곳도, 자료가 남아있는 곳도 미국이다.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미군 방첩대, 정보부대, 미 대사관 등 여러 미국의 파견기관들은 제주도의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이를 본국에 보고했다. 그들은 문서만이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까지 남겼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동영상은 무성다큐멘터리 필름 *Mayday*

74) 김경종, 『백수여음』(제주: 북제주문화원, 2007).



*in Chejudo* 밖에 없으며, 사진 또한 단편적으로 밖에 발굴되지 않은 상태다. 문서 또한 대부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고한 것이 발굴됐을 뿐 미국 정부에서 한국으로 보낸 문서들은 거의 발굴되지 않았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 등 정부 수준의 문서, 극동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수뇌부의 문서 등 미국측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료를 조사해야 한다. 당시 미국에서 발행된 신문과 잡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비롯한 대학 내 연구기관에 대한 탐색은 필수적이다. 한편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에 소장된 문서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의 여러 기관들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입수하여 있거나, 일부는 영인 출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색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밖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4·3관련 자료의 발굴은 4·3관련 자료가 과연 어느 곳까지 존재하는가 하는 고민을 더해 주게 했다. 미국에 국한됐던 외국사료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등 국립문서보관소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2002. 『4·3사건 토벌작전사』. 동연연구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 제1권-해방과 건군』. 동위원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대비정규전사(1945-1960)』. 동위원회.  
 권귀숙. 2006. 『기억의 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 지성사.  
 김기봉. 2000.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역사.  
 김일수. 1949. 『적화전술: 조국을 쪼먹는 그들의 흉계』. 경찰교양협조회.  
 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간행회. 1952. 『대한경찰전사 제1집-민족의 선봉』. 홍문출판사.

- 무라카미 나오코. 2005. "프란계문고 내의 제일조선인 발행 신문에 나타난 제주4·3인식(1948-1949)". 『4·3과 역사』 제5호, 각.
- 박찬식. 2008. 『4·3과 역사』, 각.
- 아라리연구원. 1988. 『제주민중항쟁』 I. 소나무.
- 육군본부. 1954. 『공비토벌사』. 육군본부.
- 정일권·예관수. 1948. 『공산군의 유격전법과 경비와 토벌』. 병학연구사.
-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1999. 『제주4·3연구』.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동위원회.
- Allan Millett. 2005. *The War for Korea, 1945-1950: A House Burning*.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Bruce Cummings. 1998.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the Chejudo Uprising*. paper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April 3, 1948 Chejudo Rebellion, Tokyo, March 14, 1998.
- Bryan Gibby. 2004. *Fighting in a Korean War: The American Advisory Missions from 1946-1953*. Ohio: The Ohio State University. Ph.D.
- Hunjoon Kim. 2008. *Expansion of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Causes*. Minnesot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h.D.
- Joh Merrill. 1982.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h.D.
- John Merrill. 1989.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 Kyeongho Son. 2008. *The 4·3 Incident: Background, Development, and the Pacification, 1945-1949*. Ohio: The Ohio State

University. Ph.D.

金奉鉉. 1978. 『濟州島 血の歴史-〈4·3〉武装闘争の記録』. 國書刊行會.

<ABSTRACT>

## Finding New Way of Jeju 4·3 Study

Huh, Ho-Joon

(*Special Researcher, Peace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cold war order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historical memory of 4·3 has been colored by the ideological color. The truth of 4·3 has been distorted and forgotten by the anti-communism ideology.

Studying 4·3 and Sharing the its results is the task of liberation for Jeju islanders who are suffered because of the memory of the repressed history. During the monopolized period of the state power from 1948 to 1987 , 4·3 was 'riot' and the dead was 'rioters'. After the democratized movement in 1987, civilian sphere has led the 4·3 discourse. 4·3 study has also been vivid. The government issued the White Paper for Jeju 4·3. Late President Roh, Moo-hyun apologized to the people about the past stat power's wrong doings in October 2003. This is the time that we think what lessons we have from the truth-finding and what study we do for that. 4·3 study needs to loc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we ne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er guerrilla warfare and mass killings. The

results of 4·3 study is needed too.

**Key Words** : 4·3 study, democratized movement, state power, collective memory, mass killings.